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충남 도정의 미래 전략

임양빈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전충청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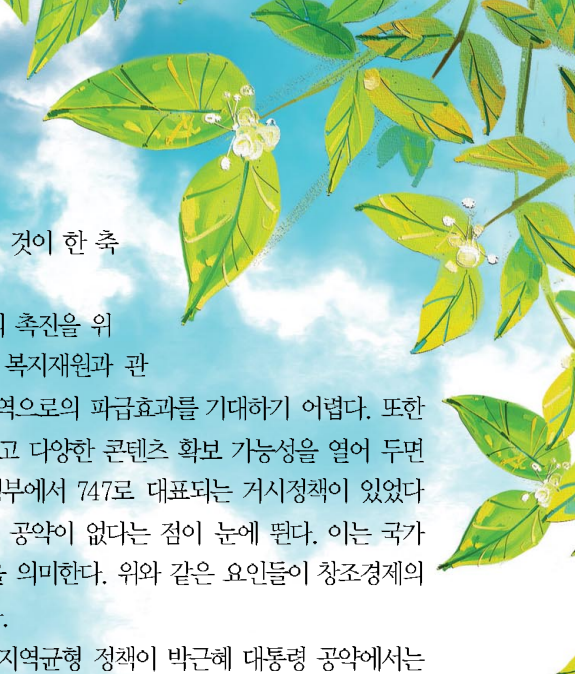
지난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앞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개 국정 목표를 발표하면서 그 아래 140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그 아래 216개 대선 공약을 배치했다. 선거 기간 중 제시된 대선 공약은 100% 국정 과제에 반영했고 이 공약들을 뒷받침할 총 210개 법안의 입법화 작업을 연내에 80%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첫 번째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국가 신성장거점 육성,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두 번째는 '맞춤형 고용복지'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제 구축,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이 5대 국정 목표로 제시됐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대선 기간 중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주요 선거이슈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미래 전략을 각 분야에서 제시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란 일방적인 성장보다 경제 주체 간 균형 있는 부(富) 분배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노믹스'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전면에 부각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일자리, 성장 등의 과제보다 먼저 언급됐고 주요 공약으로 명시됐으나 최종적으로 '창조 경제'라는 국정 목표 아래 6개 전략 중 하나로 위상이 낮아졌다.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음을 감안하면 국정 1순위는 '성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성장 전략 측면에서 국정 과제들을 정리하면 새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영의 중심축이 옮겨질 전망이다. 둘째, 과학 기술과 기술 융합 등 원천기술과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낙후된 서비스업과 농림축산업 등의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정 운영 기조 가운데 충남도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상위 개념만 있을 뿐 지역적 맥락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시행계획이 구체화되겠지만 개념의 보완은 필수적이며 지역에서 아이디어의 선제적 제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CT) 산업을 육성하고,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벤처캐피탈을 활성화



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을 중시하면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입장에서 볼 때 창조경제와 관련, 자주 재원의 보장과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이 선결과제이다. 지자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복지재원과 관련해서 지방재정권의 구체적 언급 없이 중앙정부 차원의 창조경제는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각종 자원동원이 제한된 지역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중앙정부와 연계된 창조경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 MB정부에서 747로 대표되는 거시정책이 있었다면 이번 정부의 경우 고용률 70%를 제시한 것 이외에는 거시경제 관련 공약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국가 주요 정책이 이제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요인들이 창조경제의 개념을 다양화하고 모호성을 없애는데 있어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들이다.

둘째, 지역균형 발전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제1국정 과제였던 지역균형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서는 지역인재 할당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민간기업 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앞으로 지역차원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주요 과제와 실행 조직의 실체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지역균형 관련 국정방향은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수립·시행되었다. MB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국가사업 성격의 지역사업들이 추진되었으나 이번 정부에서 지역산업 정책은 상위 정책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특히 예산과 추진주체 등에 대한 내용도 빠져있다. MB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균형을 배제한 채 대기업, 수도권 위주의 산업정책을 펼쳤다. 지역성장 잠재력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체 참여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새로운 논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대비책 마련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각 시군별 원심력은 강화됐지만 도정의 구심력은 약화됐다. 각 시군 별로 지역 이익만 추구하면서 도정의 장기 이익을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지방자치 1단계가 지나면 포퓰리즘이 오게 마련인데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도정의 장기 전략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정책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에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 문제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제시가 없는 실정에서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강조하는데, 이는 저성장 문제를 외면하면 풀 수 없는 정책이다.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성장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를 만들어낼 국가전략도, 비전을 가진 정치인도 보이지 않는다. 대중영합적 복지만 말할 뿐, 풀기 힘든 저성장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는다. 여기에 지역의 고민이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정리하면 충남도의 시급한 과제는 전반적인 지역전략의 재조정이다. 지역전략이 없는 도정 운영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결국 국가 성장 동력의 부실을 가져오게 된다. 충남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비책도 미흡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스트레티지 체인지(strategy change)를 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국가 장기 지역전략 문제로 귀결된다. 그럼 우리의 인적, 조직적 역량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충남도정은 각 정책사업별 전략은 있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전면 전략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제 충남도정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역전략을 중심으로 범충청권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지역은 이미 세종시 및 내포 신도시 건설 과정을 통해서 충청권 패러다임 변화를 대비하고 있다. 이제 범 충청권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할 담대한 시도를 기대해 본다.